

딸 던진 친모 ‘살인죄’… 가정폭력의 비극

남편과 갈등…술 마시고 범행
영아살해죄 아닌 살인죄 적용
“신고 불안감 해소 법적장치들”

부부싸움을 하다가 홧김에 생후 6개월 된 딸을 아파트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20대 여성에 대해 살인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여성단체 측은 가정폭력으로 겪는 신고에 대한 불안감을 막아줄 수 있는 법적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광주경찰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4일 자신의 어린 딸을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머니 A(2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6시 20분께 서구 금호동 한 아파트 15층에서 생후 6개월 된 자신의 딸을 베란다 창문을 통해 1층으

로 던져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영아살해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행법상 영아살해죄는 살인죄보다 형량이 낮다. 살인죄는 최소 5년 이상이지만 영아살해죄는 최고 징역 10년 형, 낮게는 집행 유예에 그친다.

경찰은 A씨 자녀가 생후 6개월 된 영아임을 고려해 살인죄를 적용했다. 영아살해죄 구속 요건은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이러한 동기로 분만 중, 분만 직후에 범행을 저질렀을 때 적용된다.

A씨는 경찰 조사결과 부부싸움을 하던 A씨는 남편이 집 밖으로 나가자 화가 난 다며 술에 취해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에 돌아온 남편은 집안에 딸이 보이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고, 아파트 주

민에 의해 1층에서 발견된 딸은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집을 나간 남편에게 “아이를 죽여버리겠다”며 전화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부경찰은 13세 미만 아동 관련 사건은 지방경찰청 단위에서 수사한다는 지침에 따라 해당 사건을 광주경찰청으로 이관했고, 광주경찰청은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 아파트 CCTV 등을 확보해 A씨 부부의 동선을 확인하는 등 정확한 경위를 따져볼 방침이다. A씨의 주장에 대해 사실 검증하는 한편 살해 후 1층으로 던졌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영아 부검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광주에서 생후 3개월 된 영아를 살해한 20대 친모 B씨가 영아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과는 다른 판단이다.

B씨는 영아가 보챌다는 이유로 얼굴을 이불로 덮어 숨지게 한 뒤, 시신까지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018년 4월 광주 한 모텔에서 생후 88일이 된 딸이 보챌다는 이유로 얼굴을 이불로 덮어 질식사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했다.

검찰은 B씨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 했다.

전문가들은 지속해서 이어진 가정폭력이 범행의 이유가 될 수도 있다며 관련 대책을 촉구했다.

A씨는 이를 전인 지난 1일 새벽 직접

112상황실에 “남편이 때린다”며 가정폭력 신고를 접수했다. 이에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A씨 등이 “사건화를 원치 않는다”고 의사를 밝혀 현장 종결 처리하고 철수했다.

여성긴급전화 1366 관계자는 “범행에는 다양한 요인이 작용되지만, 가정폭력도 그 중 큰 부분을 차지한다. A씨처럼 경찰 신고 후 이후 보복이 두려워서 취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이들의 두려움을 막아줄 수 있는 법적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가정폭력으로 인한 신고가 중복 접수 되는 등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여성긴급전화 1366측에 접수된 광주전남지역 가정폭력 신고상담건수는 1월~11월까지 1만1614건으로 집계됐다.

정성현·송민섭 기자

광주 사학법인 부정정보조금 반환 능력 시민모임 “강력한 행정처분” 촉구

시민모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
부정채용 보조금 반납 고지에도
무시하며 반환 차일피일 미뤄

시민단체가 광주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사학법인이 보조금 반환이나 제재부가금 납부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 광주시교육청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촉구했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시민모임)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광주지역 일선 사학법인들이 교직원 임용 등에서 불법 사실이 적발되어 형사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정결합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납부 등 책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시민모임에 따르면 학교법인 A학원 산하 중·고등학교 교사 6명은 이사장과 이사, 법인 실장에게 각각 1000만~1억 5000만원의 뇌물을 주고 채용됐는데, 법원은 배임수재 등 혐의로 이사장 징역 3년 및 추징금 1억 7000만원을 선고했고 돈을 주고 채용된 교사들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시교육청은 해당 교사들의 임용을 취소했으며 2017년~2023년까지 무려 9차례에 걸쳐 교사 임용취소에 따른 재정결합보조금(8억 2000만원) 반납을 학교법인 A학원에 고지했다.

하지만 A학원이 이를 무시하고 있어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2017년부터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 승소 후 2·3심에서 각하결정이 나면서 화해·권고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특정인을 행정실 직원으로 등록한 후 3억여원 상당의 여를 부당 지급한 B학원 또한 지방재정법위반 등 혐의로 이사장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학교법인 소속 행정실장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B학원은 부당하게 사용한 재정결합보조금(2억 9670여만원)을 광주시교육청에 반납했으나, 공공재정 환수법에 따른 제재부가금 1억 6000여만원을 아직 납부하지 않아 지연이자가 현재까지도 늘어나고 있다.

시민모임은 “사법절차에 따른 후속 조치이므로 적법한 행정절차를 통해 이행을 강제할 수 있어야 하지만 정작 광주시교육청은 강제 징수 등 법적 근거가 없어 공문을 통보하는 것 말고는 뽕족한 수가 없는 실정”이라며 “사학법인은 이런 점을 악용해 시간을 끌며 반환, 납부 이행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모임은 “해당 사학법인들이 이해관계만 따지고 책임을 내팽개친다면 시정명령 미이행 등 실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광주시교육청에 학교법인 임원의 승인 취소 등 행정처분을 촉구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임원의 승인 취소 등은 기존에 이미 내려졌다. 그 외 A학원의 경우 채무 기한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상호 협의 중이며 B학원은 수 차례 이행 통지를 했음에도 별다른 답변이 없는 상황이다. 내부적으로 대책을 논의 중이며 강제징수 또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혜인 기자

박용화 남구의원 ‘어린이집 지도점검 시 현장점검’ 촉구

광주 남구 어린이집이 지도점검 시 현장점검 대비 자체점검의 의존도가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광주 남구의회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남구 여성가족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용화 남구의회 사회건설위원회 의원이 “2022년과 2023년에 실시된 각종 지도점검 현황에서 자체점검은 612건(63.2%), 현장점검은 357건(36.8%)으

로 현장점검 대비 자체점검이 많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어린이집 급식 위생과 관련된 자체점검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남구 여성가족과 관계자는 “어린이들의 영양과 건강에 관련된 부분에 현장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정상이 인턴기자



크리스마스 시즌 준비 분주

정리하고 있다.

광주 북구청 일자리정책과 사회적경제팀 직원들이 4일 북구 행복어울림센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홍보관에서 주민들에게 선보일 테마별 크리스마스 관련 제품들을

나건호 기자

광주 산수동 가로주택사업 행감 도마… “반대 14세대 고통”

치매노인 동의서 효력 문제
박현정 광주 동구의원 질의

광주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산수동 일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도마위에 올랐다.

박현정 광주 동구의원(진보당)은 4일 도시관리국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관련 반대하는 14세대가 고통을 받고 있다. 이미 동의한 주민들도 후회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고통스러워 하는 것이 단순히 반대해서 만은 아니고 고금리로 인해 정비사업 시장자체가 얼어 붙고 있다”며

“금리가 올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도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조합들이 대출도 받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치매 노인 동의서 법적 효력도 문제다. 행정에서는 자문변호사 의견을 받아 법적효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며 “꼭 행정이 절차대로만 진행했다고 답하면 안된다. 따뜻한 행정 사람 중심의 행정을 펼쳐주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광주 동구는 최근 산수동 553-24 일원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 사업의 조합설립을 인가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기존 주거지의 기반 시설, 가로망은 유지하면서 빈집이나 노후 주택을 허물고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소규모 주택 정비사

업이다. 이번 사업은 지하 2층~지상 27층 높이 아파트 196가구를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 소유자 등 80% 이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데 조합 측은 80.2%의 동의를 확보했다. 하지만 조합설립 인가 과정에서 치매 노인이 동의서를 작성해 효력인정 문제가 불거졌다.

이안수 광주시 동구 도시계획과장은 “상부기관인 광주시에 건의 해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건의 하겠다”며 “운영 등 부실에 대해서는 철저히 점검을 하겠다”고 답했다.

송민섭 기자

호남대 e스포츠산업학과 ‘전국 대학리그’ 우승

호남대학교 e스포츠산업학과(학과장 정연철) 학생들이 지난 2일과 3일 대전드림아레나에서 열린 2023 이스포츠 대학리그 전국 결선 ‘PUBG: 배틀그라운드’ 종목에서 압도적인 실력으로 우승을 차지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받았다.

호남대학교 e스포츠산업학과 1학년(정성민, 한승준, 지현우)과 2학년(손도

영) 학생 4명으로 구성된 ‘HNU’ 팀은 각 권역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전국의 15개팀과 열전을 치렀다.

이번 대회에는 호남대를 비롯해 국제대(2개팀), 단국대, 순천향대, 중부대, 동서대, 동아대, 부산대, 신구대, 오산대, 전남과학대, 전남대, 조선이공대, 대전대 등 14개 대학에서 15개 팀이 참가했다.

e스포츠 대학리그는 아마추어 e스포츠 활성화를 통한 대중의 관심도 증대와 적극 참여층의 산업 유입, 신규 고용효과 창출, 대학스포츠 정식 종목을 위한 기반 마련 등 취지로 지난 2020년 출범했다.

호남대 e스포츠산업학과 학생들은 이틀간 열린 4개의 매치(Match)에서 첫날 전남과학대를 누르는데 이어 이튿날 압도적인 킬스코어로 115점을 기록하며 우승을 차지했으며, 한승준 선수가 대회 MVP를 차지했다.

김혜인 기자